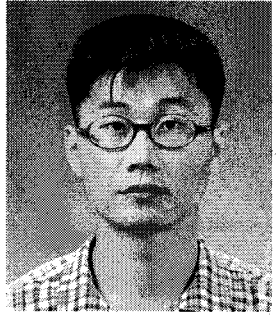


□ 남북정세에 대처하는 우리의 올바른 대북정책 방향

공존 · 공영의 발판 VS 안보 · 안정 성장 우선

햇볕론  강풍론



김근식
(서울대 정치학과 교수)

웃을 벗기고자
나그네를 죽이는 길을 택하는 것보다,
나그네도 살리고
웃도 벗길 수 있는 길을 택할 때

최근 잠수정사건과 무장간첩발견 등으로 조성된 남북한 긴장상태는 새정부의 대북정책 방향에 대한 활발한 논의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김대중 정부의 출범과 함께 천명된 대북 3대원칙은 '무력도발 불용', '흡수통일 배제', '교류협력 추진'이었고 이같은 대북정책 기조는 이른바 정경분리와 햇볕론으로 뒷받침되었다. 그러나 북한의 돌출적 도발사태로 인해 사회 일각에서는 정부의 햇볕론을 재고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갖고 있는 듯하다. 출범 5개월을 맞는 현정부의 대북정책이 급기야 시험대에 올라 있는 것이다.

본시 햇볕론은 김대중 대통령이 야당시절부터 줄곧 주장해왔던 원칙으로서 북한의 개혁개방을 유도하고 평화적이고 점진적인 통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북한에 대한 강경일변도의 압박정책보다 '나그네의 웃을 스스로 벗게 만드는' 이른바 유연한 햇볕정책이 더 효과적이라는 것이다. 이 햇볕론은 사실 90년대 이후 변화된 국내외적 환경에 부응하는 정당한 노선이다. 즉 탈냉전과 사회주의권 붕괴 그리고 북한의 체제적 위기라고 하는 작금의 정세를 고려하고 이미 결판나버린 남북한 체제경쟁의 결과를 놓고 볼 때 이제 우리의 대북정책은 과거 냉전시대의 대결정책과 달리 보다 적극적이고 주동적인 화해정책을 중시해야 한다. 이제 통일은 적대하는

두 체제간의 무한소모적 대결에 의한 '악육감식'이 아니라 어차피 같이 어울려 살아야 할 두 체제간의 평화적이고 화해적인 '공존과 공영'의 방식이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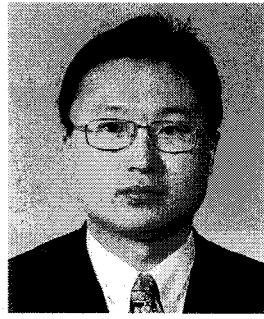
햇볕론이 강풍론보다 우월한 이유는 그것이 올바른 대북정책의 철학적 원칙에 입각해 있다는 점에 있다. '강풍론'은 냉정히 생각해보면 북한을 개혁개방과 대화와 타협의 장으로 나오게 하는 것 즉 나그네의 웃을 벗기는 것 뿐만 아니라 일방적 굴복과 고도화학적 대결관점에 치우친 나머지 그 웃을 입고 있는 나그네마저 바람에 날려버리는 반통일적 반화해적 입장에 서 있다. 웃을 벗겨야 한다는 무제한적 압박관념에 사로잡힌 강풍론은 실제 웃을 벗기기는 커녕 웃을 입은 사람마저 죽이는 그야말로 냉전적 대결적 대북정책인 것이다. 그에 반해 햇볕론은 나그네의 목숨은 전혀 다치지 않으면서 스스로 웃을 벗게 만듦으로써 남북한간의 진정한 화해와 협력을 유도할 수 있는 가장 적절한 정책이 된다. 웃을 벗기고자 나그네를 죽이는 길을 택할 것인지, 아니면 나그네도 살리고 웃도 벗길 수 있는 현명한 길을 택할 것인지 우리 모두 곰곰히 생각해보자.

햇볕론이 진정으로 빛을 발하는 때는 긴장과 갈등이 조성되지 않는 평상시가 아니다. 오히려 햇볕론은 지금과 같은 남북한 돌발적 긴장상태의 상황에서 가장

효과적인 대북정책이 된다. 평상시에 햇볕론을 강조하다가 웃을 벗기 싫어하는 나그네가 예기치 않은 상황을 만들었다 해서 감정에 치우쳐 나그네를 날려버리고자 한다면 그것은 결코 햇볕론이 아니다. 지금 햇볕론을 비난하고 강풍론을 주장하는 이들은 바로 이같은 근시안적 감정에 호소하는 것이다. 햇볕론은 오히려 위기에, 길고도 오랜 기다림을 통해 그 효과가 발현되는 것이다.

또한 강풍론자들은 '언제 북한이 햇볕을 비추다 해서 웃을 벗을 기미를 보였느냐'고 반문하고 있는데 이것 역시 본말을 전도시킨 시대착오적 주장이다. 지금껏 분단 이후 우리 정부가 북한에 대해 취한 정책은 초치일관 '강풍론'이었지 햇볕론이 결코 아니었다. 이로 인해 지금의 남북한 긴장이 지속되고 있음은 무시한 채 햇볕론이 효과가 없음을 강변한다면 그것은 정말로 순바닥으로 해를 가리는 격과 다를게 없다.

이제 막 결실을 내다던 햇볕론이 벌써부터 시험대에 올라 있다. 김대중정부는 결코 문민정부의 전철을 밟아서는 안될 것이다.



이익영
(한나라당 정책국 간사)

김대중 정부는 탈냉전시대에 걸맞는 민족화해를 이룬다는 취지에서 '햇볕정책'을 대북정책의 기본노선으로 삼고 있다. 그러면서 정경분리의 원칙에 따라 금강산 개발정책, 민간차원의 경제교류 활성화 등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동해안 잠수정 침투'와 '목호 무장간첩 침투'사건으로 현 정부의 '햇볕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감이 강하게 고조되고 있고 오히려 무분별한 '햇볕정책'이 안보에 위협이 되고 있다는 비판이 거세다.

김대중 정부의 대북관계에 있어서의 유화정책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문제가 있다

북의 변화 가져오지 못하는
무분별한 '햇볕론' 보다
문제점을 진단하고
새로운 처방을 내려야 할 때

면 새로운 처방을 내려 방향을 올바르게 세우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때이다.

첫째, 현정부의 '햇볕정책'이 경직된 남북관계를 완화하는데 부분적으로 그리고 일시적으로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기는 하지만 지나치게 이벤트성, 인기위주 형식으로 흐르고 있다.

IMF의 구조조정과정에서 파생되는 실업 등 국민 불안심리를 대북관계를 이용, 완회시켜 정권을 유지하겠다는 차원에서 성급하게 대북정책들을 남발하고 있는 것이다. 아무런 대책없이 사상전향제도를 폐지하겠다는 한나라당, 남북공동추진 및 남북차원의 창구위원회 폐지로 혼신을 초래하고 있다.

북한은 민과 관이 분리되지 않고 하나이며 북측의 국가보안법 무력화 공작과 선전선동 계략 등 통일전선 공작은 바뀌지 않았음을 인식해야 한다.

둘째, 일방적인 양보와 포용을 서두르는 게 능사가 아니며, 투박한 외투를 입고 있는 상대방은 국제사회로부터 거의 버림받은 국가라는 사실을 직시해야 한다.

어떤 방식을 통하든 북한이 하루 빨리 개방사회로 나오기를 기대하지만 상호주의가 아닌 일방적인 선심정책이 과연 효율성이 있을까 의문이다.

현대의 정주영 명예회장이 고향을 방문하면서 소 1,000마리와 식량 5만톤을 북한

에 기증하기로 했는데도 북한 언론매체는 이런 사실을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고 단 순 방북으로만 보도하였고 오히려 '잠수정 침투'로 그 대가(?)를 한 것만 보아도 북한은 예나 지금이나 무력도발의 태도를 버리지 못하고 있음이 자명하다.

국제사회나 남북한 합의를 무시하는 북한 도발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처해야 한다. 휴전협정을 위반한 명백한 도발을 우리 스스로가 나서서 사건의 성격을 '회색'시키고 유연한 대응만 한다면 우리의 안보와 국익을 누가 지켜 줄 것인가.

셋째, 우리의 경제력이 북한보다 월등해야 남북교류 가능성이 커진다.

무리하게 햇볕정책을 추진할 것이 아니라 북한이 대남공작의 환상을 갖지 못하도록 일선자 대책 등 우리 사회내부의 갈등을 최소화하고 경제위기를 하루라도 빨리 극복하는 것이 남북관계 정상화의 첩경일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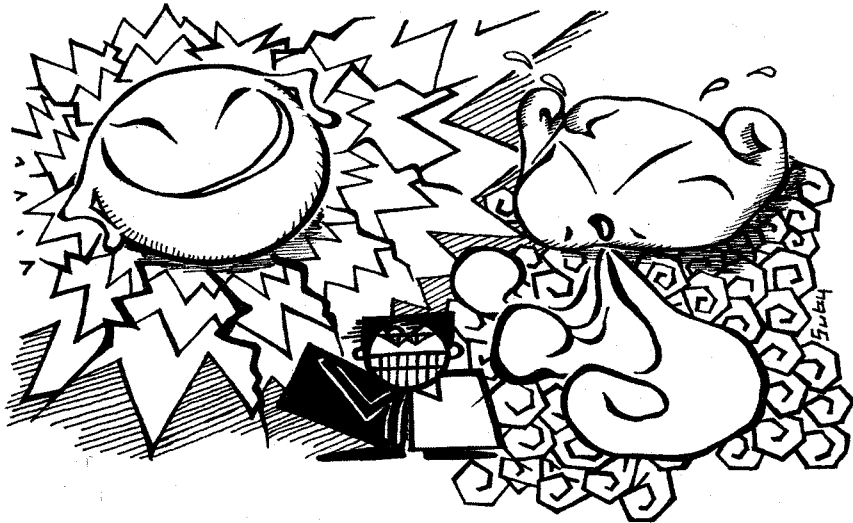
넷째, 국가 주요정책인 대북정책이 올바른 방향과 원칙에 입각하여 거시적이고 본질적인 차원에서 추진되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한다.

대북정책의 본질적, 거시적 원칙확립을 위해 남북이산가족 생사확인, 상호교류 확대, 경제협력 활성화 등 선 경제·사회 교류, 후 정치교류 원칙에 입각한 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

다섯째, 정경분리 원칙에는 기본적으로 동의하지만 철저한 상호주의 원칙, 즉 사안별 맞대응(tit-for-tat)의 실용주의 방식을 견지하는 것이 필요하다.

북한이 변할 조짐을 보이지 않는데도 우리가 먼저 화해의 제스처를 취하는 것은 대북 전략적인 측면에서도 오히려 손해다.

확고한 안보태세와 국민적 합의를 바탕으로 한 일관된 통일정책의 추진이 필요한 때이다.



□ 전국대학신문기자연합(전대기련) 방북취재 진행 및 현황

전대기련, “방북취재 승인 촉구” 활동 왕성

‘북한 대학생들도 연애를 할까?’ ‘북한대학에도 학부제가 시행되고 있을까?’

전국대학신문기자연합(전대기련)은 “4천만 국민의 알 권리도 충족시키고, 편견 속에 인식되었던 북한의 실상을 부분적이나마 올바르게 볼 수 있도록 하고, 전민족의 통일의를 고양하며 민족이질감 해소한다”는 취지로 방북취재를 기획, 추진중이다.

올초 전대기련 제22기 전체대표자회의에서 결정된 방북취재는 오는 8월 5일부터 16일까지 12일간의 일정으로 대학부의 경우 북한대학의 학부제 시행여부, 북한 교육위원회 인터넷 등의 취재를 기획하고 있으며, 학술·사회부는 북한인민대학습당 취재, 북한 주민의

생활 실태 취재 등을 계획하고 있다.

그러나 전대기련의 방북취재가 성사되기까지는 앞으로 많은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통일부에 전대기련의 방북취재가 접수되기까지도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기 때문이다.

방북취재를 승인받기 위해서는 통일부에서 요구하는 서류를 구비해야 한다. 그러나 지난 5월 7일과 6월 26일에 있었던 전대기련의 1,2차 접수요구는 서류가 완비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반려되었다. 그래서 전대기련은 지난 7월 16일에야 완벽하게 서류를 구비해 통일부에 방북취재를 접수했다.

얼마전 각종 일간지를 통해 통일부는 남북학생간 교

류에 대해 “통일부는 각 대학 학생회 및 대학생들이 북한대학생과의 교류와 협력을 원한다면 언제든지 협력하고 승인에 줄 의사가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전대기련 방북취재 실무대표인 외대외교사 대학부장 박운정장은 “통일부가 일간지에서 밝혔던 의지를 행동으로 옮겨줬으면 한다”며 통일부의 말과 행동이 틀린 점을 지적하기도 했다.

8월초 전대기련 방북취재의 공식적인 승인여부가 발표된다. 현재 전대기련에서는 방북취재 승인을 위해 공동기자단(공기단) 30여 명이 합숙을 통해 통일에 대한 인식향상을 꾀하는 동시에 일간지에 통일선언운동 공동관고를 넘으로써 방북취재 정당성의 입지를 분명히 하고자 한다.

또한 전대기련 방북취재 공기단은 오늘 오후 4시경, 세종로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전대기련 방북취재 승인을 촉구하는 대회를 개최하는 등 이후에도 왕성한 활동을 벌일 예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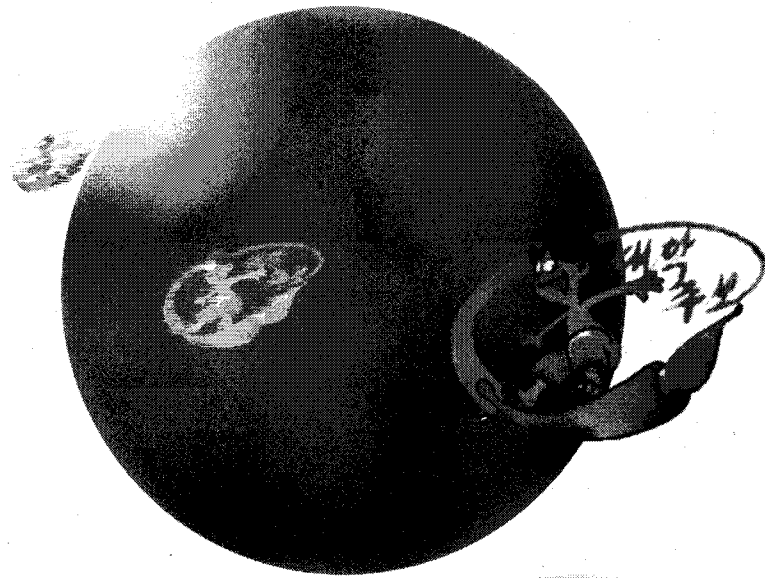
(김수란 기자)



한총련 투쟁 33일째, 명동성당을 다녀와서
그간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한총련)에 대한 탄압 중지 및 사회 현안들을 해결하겠다는 의지로 한총련 대의원 80여 명은 지난 6월 25일 명동성당에서 투쟁을 시작해 오늘로 33일째를 맞고 있다. 현재 70여 명의 대의원이 남아있는 가운데 이들은 처음 계획대로 55일 투쟁을 이루겠다는 의지를 굳건히 하고 있다

◇ ... 대학주보 이미지 광고

‘정직한 신문’ 우리에게 대학주보가 있습니다



힘든 일과 속의 여유 대학주보와 함께 하십시오.

경희의 역사는 명확한 목적의식과 절제적인 개성으로
이어져 가고 있으며 그곳에는 언제나 '대학주보'가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경희가 어떤 모습을 하고 있는지 보고 싶지 않으십니까.
'대학주보'는 경희인의 사고와 이상을 가장 정직하게 반영하고 있는 대학신문입니다.

대학주보사

